

견실한 중견기업 1순위...시민·노동계 참여 방안 고민

광주형 일자리 추가 투자 유치 어떻게 돼가나

광주시가 올 6월까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현대자동차 및 투자유치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비 투자기업 선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는 행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 선언으로 인해 투자 의향을 밝혀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일회계법인은 투자자 가능한 기업, 기관 등을 선별하고 이들의 재무구조, 대외신인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은 전략적 투자자, 즉 자기자본 2800억원 가운데 시(590억원)와 현대차(530억원)가 투자하기로 한 1120억원을 제외한 1680억원을 투자할 투자자와 4200억원을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를 구분해 투자 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작법인 설립 6월까지 마무리...선정 작업과 개별 접촉 동시 진행=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삼일회계법인, 광주시, 현대차 등은 투자자 선정 작업과 동시에 일부 개별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접촉 대상에서 국내 대기업은 거의 없으며,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과 관련 기관, 지역 중견기업 등에서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상징성을 감안해 대외 신인도가 높은 곳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삼일회계법인은 투자 유치 가능 기업들을 선별해 일부 개별 접촉하는 등 업무를 분장했다.

물망 오른 기업·기관 등

재무구조·대외 신인도 파악

5월까지 투자 유치 작업 완료

합작법인 설립은 6월 마무리

시, 현대차, 삼일회계법인은 최소한 5월까지 자기자본 1120억원과 4200억원을 모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투자 의향을 밝혀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투자 유체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상징성이 있는만큼 투자기업 선정과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한국노총 등의 참여 방안 검토 중, 공모는 제한적일 가능성 높아=이 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공모' 주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사무소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의 참여 역시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을 지키며,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 현대차, 삼일회계법인 등은 시민공모 방식을 고민중이지만, 그 규모나 참여자에 있어서는 기준을 설정해 제

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 '시민이 키우고 지키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시민주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그 방식은 다소 유동적이라는 의미다.

지난 1월 31일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광주시는 최대 출자자로서 투자유치 주관사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나머지 투자자 모집 및 주주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대차는 투자자 모집에 협력하면서 신설법인 공장 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 관리 등 기술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구체화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중장기 경영전략 등을 마련해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이 확정되면, 개별 접촉 중인 기업과 기관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편지 발송 등 대외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핵심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 중·장기 경영전략 등을 제시해 잠재적 투자자들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글로벌 브랜드인 현대차의 투자, 광주시의 보증 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투자자 전체와 협약 체결, 합작법인 설립, 하반기 공장 착공을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당초 계획대로 자동차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요청을 수락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미세먼지는 범국가적 문제...반 총장이 가장 적합"

위원장 수락 반기문 前총장

"미세먼지는 이념·정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세먼지는 국내적 문제일뿐 아니라 중국과도 관련된 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일을 해주는 데 반기문 총장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를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기구 위

원장으로 요청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만들어진 기구는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성격"이라며 "범국가라는 표현에 반 총장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님은 유엔에서 파리 기후 변화협약 등 기후 관련 협약을 이끌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셨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신 분"이라며 "이 기구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기구에서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정부 결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이날 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도출해내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을 인용하며 "제게 당장 당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인을 진단하고 중지를 모아 해법을 마련하는 모두의 의지로 흔들림 없이 실천하면 끝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당 내홍에 갈길 잃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수처 등 개혁법안 이전

민주당과 조율 난항 예상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이 21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싼 내용이 격화하자 '후추 의원총회 재소집'을 고리로 일단 숨을 고르고 있지만 선거제 개혁에 당론을 모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회의와 KBS 라디오에서 "바른미래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 입법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이라며 이날 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개혁법안 협상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조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총이 다시 열린다 해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출신 8명 중 유승민·이혜훈·유이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5명과 국민의힘 출신 이연주·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은 끝까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개혁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박주선·장병국 의원은 "다만 법안하고 연계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이찬열·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임재훈·재이배·최도자·정운천 의원 등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다음 의총에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맞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당론 확정에 끝내 실패할 경우 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결정하는 상임위인 국회 정개특위 위원회의 '자유투표'에 맡겨 결정하자고 제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위원인 김성식(간사)·김동철 의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반대파 의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당내 합의점 찾기는 난항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 행복지수 156개국 중 54위...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

유엔 행복보고서...핀란드 또 1위

한국이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전 세계 156개국 중 54위를 기록했다. 1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였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54위에 올랐다. 5.875점으로 57위를 기록한 작년 대비 3계단 상승했다. SDSN은 1인당 국내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정도 등을 측정해 행복지수를 산출했다.

한국은 기대수명(9위)과 1인당 국민소득(27위), 관용(40위) 부문에서는 상위권에 올랐으나 사회적 자유(144위), 부정부패(100위), 사회적 지원(91위) 등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순위 변동은 보면 47위(2015년) → 58위(2016년) → 56위(2017년) → 57위(2018년) → 54위(2019년) 등으로 대체로 50위권을 맴돌았다. 최상위권은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7.769점을 획득한 핀란드가 작년 이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타이틀을 차지했고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순으로 10위권에 포진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6.466점으로 전체 25위에 올라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싱가포르(34위), 태국(52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58위, 93위로 한국보다 뒤처졌다. 미국은 최근의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한 계단 떨어진 19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